



우리의 삶에도 봄이 오길 바라며...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10년 전, 후배 부부는 말하기도 힘든 커다란 아픔을 겪었다. 후배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대전 D 여고생 사건'으로 연일 보도했다. 자녀를 잃은 심정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후배 부부는 충격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온화했던 얼굴은 오늘날까지 근심이 가득 차 있다. 지난해 부부를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삶이 많이 빠져 말라 있었고 특히 엄마의 머리색이 완전 백발로 변해 마음고생이 많았음을 짐작했다. 3~5월 봄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겨울보다 200명 이상 증가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조량 증가로 인한 감정 기복 심화가 중요 원인이라고 한다. 찾아온 봄날 뜻하지 않은 죽음이 심히 안타깝다.

대전시, 8개 특광역시 중 자살자수 2위

작년 하반기 우리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보도된 사건만 여러 건이다. 대전 시청 새내기 20대 공무원, 소방공무원, 정부대전청사 30대 공무원, 성적을 비관한 10대 청소년까지 직장 내 따돌림, 성적 비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달 20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020년 자살자 수가 1만2776명이라고 밝혔다. 총사망자의 4%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8개 특·광역시 중 대전의 경우 부산시 다음으로 자살자 수가 많다. 전년에 비해 5.2% 감소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7.2명으로 높았고 2018년 대비 자살률이 9.7%가 증가했다.

10~30대 사인 중 극단적 선택 비율 가장 높아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0대는 6.5명, 20대는 21.7명, 30대 27.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10~30대의 사망 원인 중 극단적 선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과 청년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대

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삶의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을 맛이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등 부정적인 응답이 72.6%로 대전 청소년의 코로나19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 또한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가운데 절반인 54.3%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연고 시신 중 30대 미만이 63명에서 102명으로 62%가 증가했다고 했다. 청년 고독사는 취업난과 고용 불안, 가정의 붕괴, 사회안전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층 비율 높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대전 57.9명, 전국 46.6명으로 OECD 평균(17.2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위인 슬로베니아(36.9명)와도 격차가 크다.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67.4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46.2명, 60대 33.7명 등으로 연령에 비례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선녀(72, 서구) 씨는 "홀로 산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이웃과 왕래가 적고 외부 활동이 적어 우울감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몸이 아픈 이웃들은 더 높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표현해 혹시 몰라 이웃과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청노년층 '코로나 여파 경제난', 청소년 '학교 성적' 원인

서울시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대중 교수는 지난해 M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경제난을 가장 먼저 꼽았다. 코로나19 상황에 불려온 고용 절벽과 고용 불안은 젊은이들이 경제난에 처하고 좌절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민한 시기의 10대 청소년들은 사회적 단절에 취약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덧붙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 소장은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학

교 성적'과 '가족 간 갈등' 등을 꼽았다. 박 소장은 "성적 하락을 두고 자녀를 꾸짖는 부모와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다"며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부모들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세속적 교육관을 벗어나 자녀의 꿈과 비전,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한 선행과제"라고 말했다.

개인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자살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자살이 세대를 넘어 심각한 현안이자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는 좀처럼 끊길 줄 모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노인의 21.1%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및 청년을 포함한 중장년층 또한 과열 경쟁과 물질만능주의 속 취업도, 연대도, 대인관계도, 가족관계도 소원하고 있다.

오늘날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살 충동을 벗어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을 지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꽃이 피고 푸른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도 시린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

최봉호 인권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공기처럼 스며든 우리 안의 군사문화

불합리한 군대식 규율과 규정 사회 전반에 여전히 남아있는 군사주의

얼마 전의 일이다. 아내를 통해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교칙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교복 치마 밑단이 규정보다 짧아서였다. 하긴 2학년 올라가며 부쩍 짧아진 치마를 보며 '낄낄'하기도 했었다. 딸아이는 불만이 많았다. 교복도 그렇지만 너무 규제가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투덜거리는 딸아이를 보며 궁금증이 일어 개학을 하며 학교에서 보내온 생활안내문을 살펴보았다.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 선으로 할 것’, ‘성인용 구두, 원색 운동화는 신지 말 것’, ‘장식 달린 실내화 착용 금지’, ‘검정색 또는 살색 스타킹만 착용’,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장신구 착용 금지 (귀걸이는 투명만 허용)’, ‘손톱 치장 금지’, ‘화장 금지’, ‘파마 금지’...

꽤 많은 금지규정 중에는 수긍이 가는 것도 있었으나 ‘이건 왜 금지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었다. 안내문에는 복장 관련 내용과 더불어 ‘학생의 선도 규정의 징계 기준’이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훈계 및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교내 봉사 3일),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교내봉사 4일),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등이 눈에 띄었다. 어떤 내용의 훈계와 지도에 불응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학생을 선동하면 처벌받느냐는 것인지, 어떻게 품행이 불량하면 개전의 가망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소위 ‘포괄적 금지 규정’이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물론 ‘라떼’에는 더 많은 금지규정 속에서 학교생활을 했기도 하지만, 우리가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학교의 학생 규율의 모습은 좀 더 깊은 연원을 갖고 있다. 1908년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점령권을 확보한 일본 제국주의는 먼저 사립학교령을 공포하며 당시 존재하던 5천여 개의 학교 중 800여개만 남기며 친일 교육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후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본격화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양상은 학교를 ‘병영화’하는 것이었다. ‘애국조회’, ‘교련실시’, ‘복장검사’ 등이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중일



▲ 1973년 고등학교 교련 수업시간 모습

전쟁이 치르고 태평양 전쟁을 목전에 둔 1941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령으로 ‘국민학교 규정’을 각급 학교에 하달하는데 이에 학교를 군사훈련기관으로 명시했다. 교사들도 군사훈련을 받았고 학생에 대한 교육은 천황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황민’(皇民)으로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학생들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여학생들은 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써야 했다. 전쟁을 중심에 둔 남녀의 성별분업이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올 초 한 여고에서 여학생들에게 위문편지를 쓰게 해 논란이 된 사건은 우리의 학교 교육이 일제강점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해방되었지만 군대식 학교 규율이 멈춰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으로 남과 북에 형성된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이라는 시간을 겪으며 적(敵)과 아(我)의 이분법적 사고와 적대의 교육을 창출할 맹아를 안고 있었다. ‘천황의 국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반공의 국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일제 시기 진행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교육의 방식들은 목표만 바뀌었을 뿐 군사정권으로 대표되는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시기 내내 온존되었다. 당시와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어도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의 모습들 중 상당수는 수십 년 전 학교의 풍경과 다르지 않다.

통제와 제한에 익숙해진 학생들 중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의 남성은 또 한 번의 보다 강력한 통제와 복종의 공간인 군대에서 일정한 시간을 겪는다. 군 복무와 사회생활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주는 시사가 있다. ‘군 생활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조직에 적응할 수 있다’거나 ‘선임의 불합리를 지적하느니 그걸 따름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는 한국의 군대와 사회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많은 기업은 여전히도 군대식 문화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10년이 넘는 학교 교육 그리고 군대, 유사한 조직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들……. 그 과정들 속에 적응하고 나아가 때로는 주도하며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채 군사문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석진

“장애인에게도 당연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 확립 촉구

대전·세종·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시민단체는 4월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를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대전역에서 오송역을 오가는 간선 급행버스(BRT) B1 버스를 ‘차별 버스’라고 규정하고 휠체어 탑승 버스 확대를 위해 투쟁했다. 마침내 지자체는 지난 2월, B1 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2대 도입을 확정해 올해 안에 운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전·세종·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률이 10% 내외에 불과한 시도가 허다하고, 법정 대수도 채우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거주지 시·군 밖으로는 나가기도 못한다”고 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있지만



▲ 4월 11일 오전 대전·세종·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운행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전의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세종 내 특별교통수단은 밤 11시 30분까지 운행한다. 그러나 밤 9시면 이동이 제한된다. 급한 이동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모든 이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버스는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과 지역을 오갈 수 있는 광역 이동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하루빨리 보장되길 바란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장애가 차별이 아닌 차이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은정 센터장을 만나다

장애를 생각하면 신체적 장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정신적 장애도 장애 유형에 속한다. 우리가 아는 발달장애도 이에 속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015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이를 위한 기관이 만들어졌다. 대전에는 2016년 대전광역시발달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박은정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센터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다. 발달장애는 이 중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묶어 말하는 범주다. 인지 장애와 함께 의사 결정을 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개인별 지원계획'이 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 어렵거나, 자녀가 발달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있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활동을 위해 무수한 선택지와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 나이, 가정환경, 성향 등을 고려해 그 시기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도움 되는 다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가 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체육·미술·음악 등 취미 및 여가활동, 자립준비, 관람·체험 등에 참여해 낮 또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바우처(시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얼마나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활동 종류 등이 고려된다. 성인은 주간활동, 청소년은 방과 후 시간을 제공한다. 현재 대전에서 받을 수 있는 기관은 6개인데 욕구의 다양성 충족으로 인한 선택지의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이 생겨야 한다.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은정 센터장(오른쪽 네번째)와 센터 직원들.

그 외에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때 돕는 권익옹호,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권리를 대리하는 공공후견 등이 있다. 상담의 경우 직접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공간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가족휴식지원서비스가 있는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특성상 양육으로 지친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공공기관에 문을 두드리는 사례 대부분이 상황이 어렵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 그중 80대 노모가 장애가 있는 40대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죽을 다음에 내 자식을 어떻게 되나...” 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모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해도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며 좋았던 기억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고 자신감을 찾은 부모의 모습이다. “내 자녀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생긴 게 든든하다”라는 말이 일하는데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려 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동행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정권은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그 기본 권리행사가 어렵지만 하다. 보호자 동행 선거는 투표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점에서 의미 있다. 선거 장소로 이동하고 방법을 인지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행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동행자가 함께하면 일정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는 의사 표현과 인지문제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동행자의 의견에 동화되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동행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참정권 앞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면 안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이 필요하다. 특히 문해 능력이 약한 사람은 제공되는 숫자와 이름만으로는 투표하기 어렵다. 단순 벽보의 숫자와 사진만으로 인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에 대해 시각 장애인인 점자, 청각장애인에게는 동영상도 제공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따로 제공되는 부분이 없다. 쉬운 단어가 아닌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을 누군가 해석해 줄 수 있지만 해설자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잘 쫓는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는 제반이 되어있냐고 물어보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일환으로 무장애 숲이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걷기가 편하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사람도 완만한 데크길을 걷다 보면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편해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마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될까 걱정이 된다. 사실 누구나 불편해질 수 있다. 특별한 사고나 병이 없더라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노령이 되면 신체에 장애 요소가 생긴다. 2020년 장애인단체 슬로건 중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옆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살아 계속 보게 된다면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없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복지 전반의 정책에 대한 저항감이 높아질 거라고 본다. 지속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인권신문 독자들도 우리 이웃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글·사진 김유선 인권기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카드뉴스 **모두의 화장실이 생겼어요**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모두의 화장실' 생겼어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모두의 화장실 설치

- 성별과 연령, 장애 여부, 성 정체성 관계없이 사용가능 -

지난달 16일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었어요. 한 눈에 다양한 사람이 그려진 픽토그램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지하 1층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모두의 화장실 설치

- 차별 없애고, 모두를 고려한 편의 기능 추가 -

화장실 내부에는 아이를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핸드레일, 휠체어 이동시 필요한 작은 세면대** 등이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모두의 화장실 설치

- 성중립 화장실은 독립된 1인 공간 -

1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에서 '달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중' 표시가 띄워지며 이 때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두번씩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왜 모두의 화장실 필요할까?

A.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사회적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불평등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모두의 화장실이란?

(=혼성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A. **성별·나이·성 정체성·성적지향·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입니다.**

A. **칸마다 잠금장치와 세면대,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일반 화장실에 비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국내외 모두의 화장실 현황

-국내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서울시성평등 활동지원센터, 서울 혁신파크 등 시민단체 곳곳에 설치

-미국
2015년에 백악관 화장실에 설치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

-스웨덴
공공화장실의 70%가 성중립 화장실로 사용

전세계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설치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환영의 목소리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모두를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어'

- "장애인 혹은 어린아이가 보조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편리하다"
-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눈치보지 않고 이용 가능하다"
- "오히려 타인과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 "성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우리의 목소리

'누군가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 성범죄나 불법촬영 우려'

- "불법카메라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 "곧 바로 설치한 것은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응을 보고 해야 했다"
- "과거에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다른 점을 모르겠다"
-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거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모두의 화장실' 설치로 그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화장실' 응원해주세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 Human Rights Center

성별과 연령, 장애 여부,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을 아시나요?

지난달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화장실과 비교해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고려한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모두의 화장실' 설치하는 그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걸 의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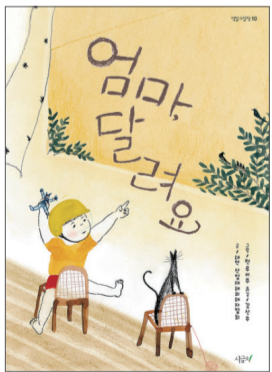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QR코드

박연수 인권알림이단

동화속인권 **엄마 달려요**

누군가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 산업재해 이제 그만!



▲ 대만 산업재해피해자협회 글/ 천루이추 그림/ 김신우 역 출판사 시금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공사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펜스 안,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그 옆에는 안전모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아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안전 사고의 문제가 동화책 속 어린이의 눈에 비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소중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짐작도 못할 일이다.

지난 4월 9일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건으로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또, 올해 초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나,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여수 NCC 공장 폭발사고는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노동권은 근로권이라고도 한다.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써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제도적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노동권의 보호 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준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다.

2021년 사망사고 산업재해는 828명... 전년 대비 54명 소폭 감소했지만, 재해유형별 '떨어짐' 사고 351명(42.4%) 안전수칙 위반(안전난간 미설치 등) 업종별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의 사망자로 전체 70% 기타업종 227명(27.4%)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바빠진 오토바이 배달종사자 재해 사망사고가 최근 5년 이내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위반 등 안전사고로 인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줄이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방도 가능함을 영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산재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2022년 1월에만 38명 산업재해 사망, 하루에 1.6명'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2018)을 계기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 회사에서 큰 사고 날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안전 불감증의 작은 불씨가 산업재해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게 안전은 기초이다. 근로자는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질 좋은 제품, 서비스를 양산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작동해야만 한다.

한숙희 인권기자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 약속 그리고 책임'

천개의 바람이 된 아이들

나의 사진 앞에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 '천 개의 바람이 되어' 가사 일부 -

2014년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자신이 대표곡 중 한 곡인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세월호 추모곡으로 헌정하면서 음원 수익금 전액을 유가족에게 기부했다. 이후 이 노래는 세월호 노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노래가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로 세월호 사건을 검색했어요.”(임**, 13세)

매섭던 추위가 어느새 물러나고 우리 곁에 또다시 따뜻한 봄이 왔다. 봄의 전령은 봄을 시샘하는 3월의 눈과 얼음을 찾아가 향긋한 봄 향기를 전한다.

그러나 지난 여덟 번의 봄이 오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녹지 않는 시린 얼음으로 자리 잡은 이들이 있다. 올해로 8주기를 맞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다.

성인들에게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여전히 그날을 아파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그만 잊고 싶다고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에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생들에게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세월호, 불신은 커지고 신뢰는 무너지다

임**(13세, 초6)은 “사건에 대해 알고 나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과 엄마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라고 말했고 이어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라고 대답했다.

정**(11세, 초4)은 할머니께 사건에 대해 듣고 유튜브로 찾아봤다고 했다. 보면서 너무 무서웠고 그 후 어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세월호와 함께 우리 사회의 신뢰가 침몰했다. 세월호 선장의 지시를 따라던 많은 사람이 오히려 희생됐기 때문이다. 권한과 지위에 따른 이익에는 민감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는 매뉴얼도, 매뉴얼을 지키는 책임자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겼다.

행동하지 않은 책임자, 어른들의 책임을 묻다

신**(13세, 초6)은 돌봄교실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

해 듣고, 친구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고 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라며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홍**(13세, 초6)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배를 튼튼하게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수리도 철저하게 하고요. 선장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해요”라고 대답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기울어진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불안해할 때 책임자는 행동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안전 사회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또 다른 참사를 막고 반성과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피해자의 권리가 과연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연이은 붕괴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에도 지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건을 마주하고 세상과 어른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아동들과 인터뷰를 마치며 다시 한번 희생에 대한 '기억', 생명 존중 안전 사회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한다.

강민주 인권기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라”

세월호 참사 8주기

대전 기억다짐 주간 선포 기자회견

4월 11일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4·16 특별위원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8주기 대전 기억다짐 주간'을 선포했다.

벚꽃이 만개한 따스한 봄날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억을 다짐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용태 천주교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신부는 “촛불 정부라 불리는 지난 5년간의 정권은 세월호 참극의 진상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단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5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유족들은 이로 인해 8년 전 멈춰진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사건 사고가 아니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철학과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 4월 11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생명 경시의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다짐 주간' 동안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3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판결 비평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16일 '세월호 순직 교사, 소방관 기억식',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다짐 문화제'가 진행된다.

글 황성업 인권기자
사진 장재완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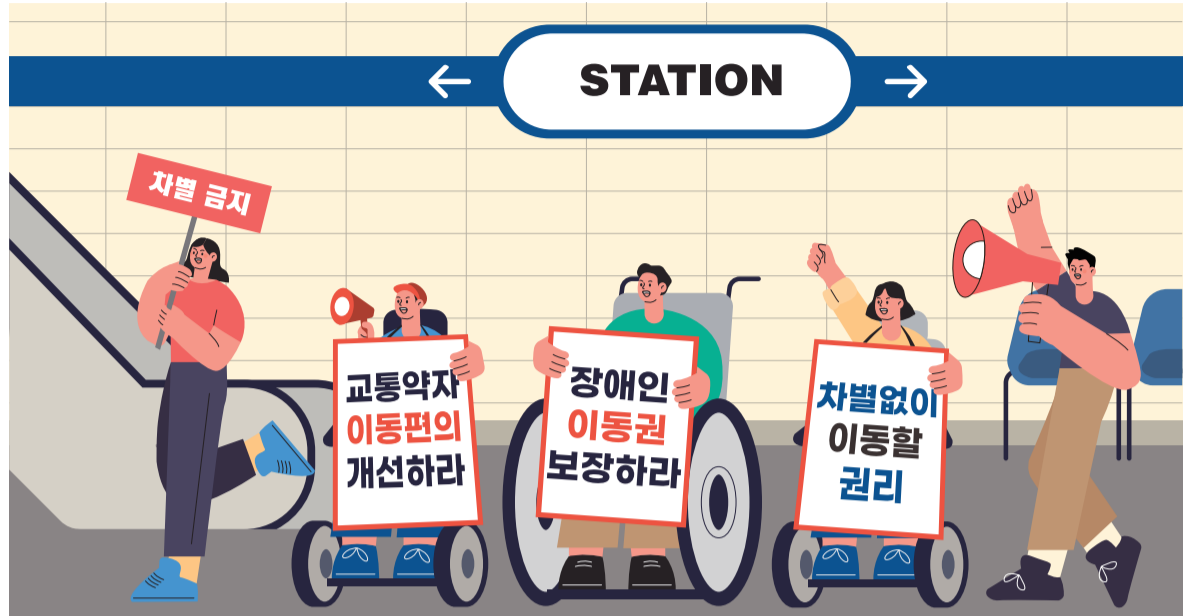
모두가 경험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감과 연대가 해결책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운동장이 기울어져 한쪽이 유리한 지점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운동장이 자기 팀의 골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상대 팀이 골을 넣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 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리함 만큼 자기 팀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 학교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접할 때 '원래 그랬어' '너무 애쓸거 없어' '해도 소용 없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억울하면 성공해야지 별 수 있어?' '조금 참으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불공평한 구조를 없애기 위한 단체 행동권은 이미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하철 시위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두고 비장애인들의 불평 또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짜증이 난다. 민폐를 끼친다. 너무들 한다. 등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장애인 특혜나 무임승차, 공권력은 뭐 하나?'라는 수위 높은 비난은 인권감수성의 부족에서 오는 차별적인 말이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당연히 권리를 누려왔던 사람들에게는 잠시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과 연대는 못하더라도 편견과 차별과 혐오라는 화살을 날려서는 안된다.

남들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은 왜 편견과 차별, 혐오의 폭력을 견디며 시위를 해야만 하는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가 비장애인들에게도 편리해진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도 장애인만이 아

닌 모두를 위한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88%가 후천적인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누구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며, 과업 등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는 유럽의 시민성도 매우 필요하다..

유복례 인권기자

인권 칼럼

과학기술의 발달, '인권'과 동행 하길

오는 6월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2호가 발사 준비가 한참이다. 누리호 1호는 지난해 10월 발사됐다. 발사체가 목표했던 700km 고도에 무사히 올라가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1차 발사 당시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돼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연구 총책임자는 '미완의 성공'이라는 설명으로 아쉬움을 달랬지만 당시 네티즌들은 "일하다 누리호 발사 보고 울었다", "뿌듯하다", "가슴 벅차다" 등 반응을 보이며 격려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많은 사람의 기대와 관심을 받는다.

매년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의 하나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과거 청동기와 철기가 가져다준 인류 문명의 혁신은 20세기 플라스틱과 나일론 출현으로 꽃을 피웠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마다 다양한 신물질이 생겨나고 코로나19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음과 양이 존재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누리는 윤택한 삶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와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적 문제의식과 사고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미첼 바첼라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AI 인권침해 대책 마련 때까지 판매 중지해야"며 합당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인권 침

해의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판매와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기술 발달이 인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출시된 지 3주 만에 성희롱 및 차별·혐오 등의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은 전에 없었던 '정보인권' 혹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게 고려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에 '인권'의 분야가 전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은 눈이 부시게 발전해왔고 그 중심에 수년간 연구하고 도전하는 과학 기술 연구진들이 있다. 최근 새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수준의 국격을 제고하는 과학기술 구현은 개인의 포부와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대전환을 통해 창의적 기술 주도 국가로 발전시키고 더불어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인권교육의 경험을 부여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의 과학인들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인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여 노벨상을 받는 한국인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선우 인권기자

기억해주세요

두 번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아픈 역사 4·3



74년전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주도 인구의 10%에 달하는 민간인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무차별 학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에서 1954년 9월 21일까지 이루어진 학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 4·3사건을 기억해주세요.



이미지 출처 /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페이스북

중도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를 돕는 상담가

한남장애인심리상담센터장 김용구 목사를 만나다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꿈꾸던 일상에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변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중도 장애인이 된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37년 동안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누군들 좌절하지 않겠어요?”

‘한남장애인심리상담센터’ 센터장 김용구(사진) 목사는, 그렇지만 담담한 어조로 장애인이 된 과정을 설명했다. “2009년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장시간의 심폐소생술을 거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생명은 건진 대신 척수 신경이 손상돼 가슴 아래로는 신경학적인 마비가 온 거죠.”

지난 2020년 대전시가 주관하는 ‘대전장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목사는 올해 2월 한남대학원에서 기독교상담 전공, ‘중도척수손상장애인의 상실과 고착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사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장애유형별 시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는 2,633,026 명 (남: 1,521,260명, 여: 1,111,766명)이다. 대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 이어 6번째로 많은 72,853명 (남: 42,447명, 여: 30,406명)에 달한다. 2020년 대전시 인구 146만 4천 명 중 5% 가까운 비율이다. (참고: 대전시 2020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 32,542명 중 한 명으로 분류되며, 좀 더 세분화 된 통계는 없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2,000여 명이 척수손상 장애관정을 받고 있다. 그 중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추락 및 낙상, 스포츠 및 레포츠 등 외상으로 인한 중도장애가 90%, 척수염과 척수결핵, 추간판 손상 등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10% 정도다.

‘2021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보면, 중도장애인 73%가 사고 이후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중에서도 사고 등으로 장애가 된 척수장애인은 중도, 중복, 중증 3중 장애가 많다. 그만큼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렵다. 현실이 그런데도 초기 재활을 지원하고 일상 복귀를 위한 훈련기관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재활시스템이다.



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를 돕는 척수장애인

우리나라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재활시스템 속에서 김용구 목사는 빠른 일상복귀를 이루어냈다. 처음 1년 반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마치지 못한 공부에 몰두해 논문을 쓰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막연하게, 장애를 입었으니까 사회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을 공부했다. 급작스러운 신체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2015년부터 척수장애인을 직접 만나도록 이끌었다.

“바뀐 신체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빨리 정한 거죠.”

그가 교육학, 사회복지학을 비롯해 상담학을 전공한 이유이기도 했다. 공부를 하면서 장애인을 돕는 영역, 인권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에 당사자보다는 비장애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실은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도 된다. 그래서 ‘당사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대전척수장애인협회가 연계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정보 메신저’라는 병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척수장애환자를 직접 찾아갔다.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통해 많은 장애인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이동도 어렵고, 대소변 문제, 성기능 문제, 직업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이 돼야 해요. 게다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심리상태 등 경험에서 비롯된 세심한 부분까지 도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한남장애인심리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자신처럼 중도 장애인이 된 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이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척수장애인 재활시스템의 부재

스웨덴 같은 경우 척수장애인 전문병원이 있어서 치료와 재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병원 재활의학과로 간다. 척수장애인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활이 늦어지는 이유다. 실제 국내 척수손상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유럽의 7개월에 비해 4배 이상, 미국의 2개월에 비해서는 무려 15배가량 긴 29개월이라고 한다. 그 기간동안 일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치료’ 위주인 한국의 재활 시스템은 소위 ‘재활난민’을 양산한다. 처음 장애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하도록 만든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지만, 나올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계속 병원을 전전하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 김 목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상으로의 복귀란 일상적인 생활과 직업 영위를 말한다.

스웨덴 등 유럽과 미국의 척수장애인 재활 시스템은 병원생활을 되도록 짧게 하고 직장 및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한다. 김 목사는 병원 방문 정보메신저인 자신의 상담을 통해, 사고 이전의 직업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 복귀를 하게 된 사례가 많다고 전한다. 중도척수손상장애에 대한 의료적 치료와 복지적 돌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된 본인의 일상복귀에 대한 의지에 더해진 장애당사자 상담이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척수장애인 당사자 상담이 제도화 되었으면

김 목사는 척수장애인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성을 띠면 더욱 좋고, 여기에서는 의학적인 치료와 재활 뿐 아니라, ‘찾아가는 정보 메신저’ 같은 상담 과정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기적이고 꾸준한 상담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척수장애인 상담협회’도 필요하다고 한다. 중도척수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데 비해, 본인이 심리상담이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도 가족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 때문이다. 상담이 가능한 기관이나 상담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접근 자체가 어렵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복귀에 대한 다각적인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글: 사진 조강숙 인권기자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일상생활 중 경험한 인권이야기, 독자투고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인권도서 서평 등 인권 관련된 글이라면 가능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

보내주실 곳 djhr1210@naver.com 분량 1,000자 이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인권기자단 모집

2022. 4. 12 ~ 5. 06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시민 기자를 찾습니다.



● 인권기자단의성격

비상근 인권기자로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취재 활동 및 기사 작성을 수행합니다

● 인권기자단, 누가 될 수 있나요?

모집대상 : 인권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적극적 취재 활동이 가능한 대전 시민(성인 및 청소년 포함) 누구나
모집인원 : 10명

● 모집·선발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기간 : 2022. 4. 12~ 5. 6
결과발표 : 2022. 5. 10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활동기간 : 위촉후 1년
기자단 위촉 및 교육 (필수참석) : 2022. 5. 14 (12:30 ~ 18:00)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주요활동)

- 대전광역시 인권 현안 취재 및 생활 속 인권기사 작성 (글,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기사화 예정)
- 작성된 기사는 대전인권신문 및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가능
- 인권기자단 워크숍, 월별 편집모임 등에 참여

● 인권기자단이 되면 뭐가 좋아요? (활동혜택)

- 수료증 발급 및 우수 기자 선정
- 기사 게재 시 매월 소정의 원고료 지급

2022년 인권기자단이 되고 싶어요!

선발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인권관련 자유주제 기사 1 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접수(djhr1210@naver.com) /
 이메일 제목 : 2022 인권기자단 지원[홍길동]
 문 의 : 042-369-1210 (대전광역시 인권센터)